

# 야권, '김건희 불기소' 강력 반발... 검찰 개혁 예고

민주 "권력 하수인·혁신 '면죄부' 야 법사위원들 "수사·기소 분리" 수사팀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 한동훈 "국민 납득할지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은 김 여사 의혹 수사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며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 "검찰이 기어코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스

회의에서 "검찰이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 여사에게 바로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며 "이제 특검의 필요성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스모킹 미사일급의 정황·증거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 심리적 탄핵을 넘어 법적 탄핵의 시간이 오고 있다"며 "특검 수사서에서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오

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심판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검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고 손해

를 본 전주는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정작 23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김 여사 모녀는 범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며 "더는 검찰이 아닌, 권력의 제3부속 실로 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여사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대통령 실과의 사전 교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노골적인 권력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의혹 수사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책위의 김남희 의원과 노영희 변호사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며 "검찰은 김건희 씨의 심각한 명백한 범죄를 은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사 탄핵을 포함해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변호사는 탄핵과 관련 "직무유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검토하고 탄핵 후속조치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반발 속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등 세 가지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제시했다.

한 대표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오늘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광주시의회 "화물차 불법 변호판 문제 해결을"

심철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조석호 "기반시설 관리 개선을"

광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광주 화물차 불법 변호판과 기반시설 관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328회 임시회 광주시에 대한 시정질의를 가졌다. 이날 질의에는 조석호·심철의 의원이 나섰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관련 실·과장 등이 참석했다.

심철의 의원은 "광주시 등록 화물차 9만 3518대 중 일부가 사다리차에서 일반 화물차로 불법 변경해 운행되고 있다"며 "이들은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성실하게 일하는 운수업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특별 조사팀(TF)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화물차 변호판 불법 재사용 및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해 모든 화물차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또 "염주 실내수영장 강사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의 지휘 아래 근무하고 있음에도, 위수탁 계약의 개인사

업자로 분류돼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시공사는 이 문제에 대해 공정한 근무환경 등 시스템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남 도시공사 사장은 "강사들 간 갑질 문제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수영 회원 갑수 위·수탁 계약서'의 계약 해지 조항 강화 및 평가 제도 도입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인권침해 방지와 이용객 서비스 질 향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석호 의원은 2020년 수립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실행 부진을 비판했다. 그는 "관련조례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뒤야 함에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은 단일 행정의 전행"이라며 "기반시설관리를 활용해 정부 지원을 받는 등 개선 총당금 재원 조달 방법과 총당금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시장은 "기반시설위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2025년도 수립 예정인 2차 기반시설관리 계획 심의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개선을 위해 정책발굴에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 정준호 "동광주~산월, 5년 연속 서비스 등급 최하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사진)은 17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산월 구간이 5년 연속으로 서비스 등급에서 최하위인 'F 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시급한 상황이다.

호남고속도로는 최고 등급인 'A 등급' 구간이 없고, 전체 평균 수준은 C~D등급에 머물러 전반적인 교통량 개선이 필요하다.

정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전체가 심각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다"며 "확장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야 '김건희 특검법'... 여 '명태군 방지법'

민주 '명태군 의혹' 추가 재발의 국힘 '여론조사 조작 행위 근절'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명태군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특검법과 상설특검이라는 투트랙을 통해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었던 김 여사 관련 의혹 8가지를 13가지로 늘렸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가 명태군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

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군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와 관련해 그간 국민적인 불신이 깊어져 있다"며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쇠신할 수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군 씨는 지난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를 조작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왜곡해 발표·보도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여론조사기관은 결과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했다.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한 기관·단체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처벌이력 있는 자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새로 설립된 여론조사기관도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한동훈 대표는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힘에서 활개치는 것을 막겠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온 것이 여론조사 장난질"이라고 목적을 높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 이재명 "농작물 수입허가권 생산자조합에 줘야"

강원 평창 배추농지 일대 방문 "기상이변 대비 대책 강구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농작물 수입쿼터(할당) 허가권을 국내 생산자조합에게 주도권 관련 입법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평창군 배추농지 일대를 찾아 농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작물이 흉작하면 수입하고, 풍작하면 나몰라라하는데 법을 바꾸면 된다"며 "현행법으로 (농가에 수입허가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배추 생산량이 줄면서 배추값이 폭증하자 농촌 현장을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표는 "수입허가권을 해당 작물의 생산자조합 이런 곳에 주자"며 "그렇게 하면 수입도 마구안 할 것이다. 본인이 망할 테니 자동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기구의원에게 "농해수위에서 (입법) 준비해달라. 필요하면 당론으로 만들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배추 농가는 휴경제 도입과 토양개량 사업 지원, 승계농업 상속세 감면, 외국인

노동자 고용환경 개선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농작물 전체 생산유통구조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며 "농작물 가격 급등 문제로 도시 소비자도 고생하고 생산유통단계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두가 괴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 대책들도 강구돼야 한다"며 "그 안에 생산비 인하 문제나 생산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 종자 개량 문제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